정후식 칼럼

광주 환경의 마지막 보루, 민간공원

논설실장·이사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진다고 하지만 온통 빌딩들로 둘러싸인 도심에서는 사철의 흐름을 제때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정취는 아스라할 뿐이다. 치솟아 오르는 고층 건물과 성냥갑 아파트들이 장벽을 두르며 자연과의 교감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79%)이 가장 높은 수직의 콘크리트 도시 광주에서 그나마 사계의 순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이다. 그곳에선 계절의 지표인 나무와 풀꽃들을 만날 수 있다. 제1호인 광주공원을 비롯해 현재 지정된 도시공원은 636개소(1994만㎡)이다. 하지만 공원 조성을 마친 곳은 395개소(875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시민 1인당 공원 조성 면적(6.0㎡)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그 사업 '특례'인가 '특혜'인가

한데 이들 도시공원이 내년 7월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만 25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공원 용지로서 효력을 잃은 부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녹지가 무더기로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 광주 지역 25개 공원의 부지 면적은 1101만㎡로 국제 규격 축구장 1540여 개 크기다. 이를 매입하는 데는 1조 8000억 원, 공원 조성 비용을 합치면 2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가 일찌감치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연차별로 매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어차피 그러지 못한 마당에 현재 재정 형편으로는 감불생심(敢不生心)이다.

공원부지를 사들이자니 돈이 없고 손 놓고 있자니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30% 미만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가능한 일부 부지를 민간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나머지 70%의 공원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25개 도시공원 가운데 15곳(268만㎡)은 2023년까지 2613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중 아홉 곳(832만㎡)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중앙1·2,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공원 등 2단계 사업 대상은 비공원 시설 면적을 평균 9.3%로 대축 축소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덕분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어쩌다 최근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니 말이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8일 민간공원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해 정량 평가와 시민심사단 및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최고의 노른자위 터로 관심을 모았던 중앙공원의 경우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2지구는 금호산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일부 탈락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광주시는 한 달 가까이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모집 공고와 평가 과정에서 토지 가격 산정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평가 보고서 유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와 함께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파장을 불렀다. 민관 거버넌스 참여자들마저 시의 감사 착수 배경과 결과는 물론 우선협상자를 재공모하지 않고 재평가를 통해 변경한 점, 그리고 공익성 확보를 위해 참여했던 도시공사가 돌연 그 지위를 자진 반납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급기야 환경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경실련은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지난 9월 초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담당 간부 공무원을 구속했다. 기각되긴 했지만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업 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시가 탈락 업체의 이의를 받아들여 감사에 나선 행위, 도시공사의 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한 행위 등을 '직권 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들은 명백한 평가 오류가 많아 감사를 실시해 바로잡았고, 이를 통해 탈락 업체들의 소송 제기 등 혼란을 막은 '적극 행정' 행위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처럼 의혹은 난무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이니, 향후 검찰이 그 진상을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직권 남용'인지 '적극 행정'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소 후 법정 공방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공공성은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 결과야 어찌 되든, 감사와 수사가 거듭되면서 이미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차질이다. 일몰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하면 공원 부지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광주의 허파다. 천연 공기청정기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 변화를 완화한다. 폭염, 침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준다. 환경 복지를 가능케 하는 '그린 인프라'인 셈이다. 또한 녹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활력과 위안을 준다. 그러나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정부가 지자체에만 보호의 책무를 떠넘길 게 아니라 예산 지원과 일몰제 시행 시점 연기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사업이 시민들과 미래 세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새겨 공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시민들도 녹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계절이 살아 숨 쉬는 영원한 '녹색 도시 광주'를 위해.

은펜칼럼

거리 정치가 남긴 메시지

한 국 환
전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21세기 세계 각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념을 초월하여 무한 경쟁을 펼치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중에 4대 강국들도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다. 일본 정부는 침략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1965년 한일협정만을 내세워 한일 무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 부담금 인상 요구와 중국·러시아의 영해 침범 도발 등으로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런 판국에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집회가 이어졌다. 한쪽은 공수처와 선거법,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그리고 다른 쪽은 조국 사퇴와 대통령 퇴진 등을 내세웠지만 두 집회의 최고 이슈는 조국 전 장관 거취 문제였다. 장관 한 명의 임명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듯 길거리에서 국민간 대결이 계속되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펼쳤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런 싸움을 하는가? 우리는 자문자답해 봐야 한다. 사실 두 집회는 국민 여론의 '양자 분열'로 상대편에 대한 '공격적인 의사 표시'였다. 그래서 소위 '거리 정치'의 집회가 이뤄졌고 공간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참여자의 수로 세력을 과시했다. 이는 그들 나름의 민심을 표출하는 행동 방식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은 검찰 개혁(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 핵심이다. 두 가지 입법 성사는 현 정부의 숙명적 과제다. 이의 성공 여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패하면 촛불을 든 국민의 열망과 명분을 다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0년 전 삼성 X파일, 2014년 세월호, 그 후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서 이처럼 많은 검사가 투입돼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가? 이는 검찰의 자의적 무소불위의 슈퍼 파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공화국 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까닭이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법무부 수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강력하게 추진되던 검찰 개혁이,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두 달여 동안 이어온 '거리 정치'가 단순한 진보와 보수의 싸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대결로 끝난다면 전 국민이 보여준 에너지, 열정과 외침들이 아무 성과 없는 그들만의 집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집회가 남긴 핵심 메시지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에 있음을 볼 때 국가 중추 권력 기관인 국회·법원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아울러 반칙과 불법, 편법이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 고

5월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이 지 현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 시인·연극인

지난 11일, 전두환의 재판이 있던 날. 골프장은 뻔질나게 다니면서 광주는 기피하고 외면하는 뻔뻔스러운 전두환은 끝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참석한 변호사와 조종사들은 어이없게도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그날 저녁, 허름한 식당에서 이름 없는 소설가와 함께 한 의인을 만났다. 88년 5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80년 5월 23일 당시의 주남마을과 송암동 양민 학살 참상을 폭로한 최영신 전 7공수 하사관이다. 그는 참상을 폭로한 후 살해 위협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당신의 용기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선언에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2만 명에 육박하는 계엄군 중 불과 몇 사람만이 그날의 아픔을 전해서 안타깝다고도 했다. 더욱 슬픈 것은 계엄군으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국민들로부터는 계엄군이란 인식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마치 5월 영령들이 구천 하늘을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그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에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고향이 경상도 영주입니다. 우리 계엄군들은 명령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고통스럽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지 아십니까? 우리도 억울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진심 어린 그의 말이 늦가을 허공에 웅웅거린다. "내년 40주년 이전에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상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12월에는 송암동의 참혹한 현장에도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우리도 39년 동안…."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대신 '휴우' 한숨을 내쉰다.

1995년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전두환 일당이 구속되었으나 곧바로 풀려났다, 광주 학살의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 사면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후 끊임없이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들이 준동했다. 또다시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 늦게나마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한국당의 방해로 답보 상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최근에야 개정안을 통해서 새로운 5·18 조사위원이 추천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다. 5월 단체들도 추천 인사의 면면에 문제가 있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수용하려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의 결단만 남은 셈인데.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아마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안종철 박사를 비롯한 아홉 명의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39년 동안 왜곡된 5월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광주 시민의 한을 풀 일만 남았다.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의 신분과 예우 등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용서를 구하면 뜨겁게 보듬어 주자. 우리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아니 죽음마저 달관한 민주시민들 아니던가?

社 說

군 공항 이전 당사자들 우선 대화부터 나눠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무안군 김산 군수에게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범군민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이하 범대위)에 대화를 위한 면담을 공식 제안한다. 시간과 장소는 무안군 측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무안 지역 사회 관계자들이 광주시를 항의 방문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날 범대위와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이 시장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을 기정사실화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9만 무안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전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 시장은 비공개 면담을 제의했지만 범대위는 자칫 협의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하고 돌아섰다고 한다.

앞서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거쳐 당초 거론되던 네 곳의 후보지 가운데 무안군과 해남군을 이전 적합지로 정했다. 국방부는 이들 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두 곳 모두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들은 논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군 공항 이전이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이고 주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해남군 등 해당 지자체장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부터 나눠야 한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지역의 미래 청사진, 소음 대책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생의 해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찬성이냐 반대냐의 최종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국제 설계 공모 도서관 광주의 랜드마크로

광주시가 새로운 시립 도서관을 짓기 위해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전을 오는 25일 공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참가등록을 받은 후 내년 2월 7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 설계 당선작 상금은 무려 17억3000만 원이다. 국내외 저명 심사위원도 초빙된다.

시는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에 장서 80만 권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국비 156억8000만 원 시비 235억2000만 원 등 총 392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은 도심 혐오 시설이자 갈등의 공간이었던 상무소각장 재생사업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상무소각장은 지난 2000년 9월 준공된 이후 광주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소각해 오다 인근 주민들의 폐쇄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광주 중심부에 소각장을 존치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광주에 이롭지 않다는 판단 아래 2016년 폐쇄됐다.

우리는 흔히 도서관 하면 책 읽는 공간보다는 수험생들의 공부방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름지기 도서관은 한 도시의 지적 수준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보여 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21세기 도서관의 '지존'(至尊)이다. 지난 2011년 국제설계공모에서 당당히 1등으로 당선된 재독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 씨가 설계했는데, CNN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할 만큼 건물 자체가 도시 브랜드다.

광주시가 기왕에 거액의 돈을 들여 도서관을 짓는다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독특한 외관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까지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콘텐츠로 '한국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無 等 鼓

시위, 제3의 물결

우주가 거대한 폭발로부터 생겨났다는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우주적 나이도 똑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성싶다. 수백억 년 전 우주가 하나의 점과 같은 상태였고, 이 점이 폭발해 현재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은 사실상 같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구촌 전 지역에서 인류의 생물학적·정신적 진화가 비교적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300만~5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등장한 이후, 지구상 각지에서는 인류의 진화가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정신적으로도 기원전 552년 공자를 필두로 예수·부처·마호메트가 불과 1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나 거대한 정신적 진화를 이끌어 냈다.

5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유구해 보이지만, 수백억 년에 비해선 찰나일 뿐이다. 특히 최근 몇 세기 들어 정신적인 차원의 진화에 걸리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지금은 아예 전 지구적으로 동기화되는 느낌이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인간 사회 사이의 힘과 기술의 차이는 지리적·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물리적 거리가 있는 지리적 환경과는 달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의 정보 환경이 똑같아진 지금, 모든 사회의 가치관이 급속히 동기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셈이다.

최근 몇 달 간 거의 모든 대륙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흐름을 '제3의 (반정부 시위) 물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을 꼽고 있다.

디테일이야 다르지만 몇 년 전 촛불 혁명이나,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들도 대의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치관의 전환 또는 동기화에 합류한 것이라면, '이 전환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